

(첨부)

##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15~11.21)

### 1. 新 경제대책 사상 최대 55.7조엔 규모

- 日 정부·여당은 새로운 경제대책과 2021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안을 11.19일 각의 결정할 예정이다.
- (경제대책 4개 축) 금번 대책은 ▲코로나19 확대 방지 ▲‘위드 코로나’ 하에서의 사회경제 활동 재개 및 위기 대비 ▲미래 사회를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기동 ▲안전·안심 확보(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등)의 4가지를 축으로 구성될 예정
- (재정지출·사업규모) 국가 및 지방의 부담을 포함한 재정지출은 55.7조엔 정도로 2020.4월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48.4조엔)을 상회하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민간 등 지출을 포함한 사업규모는 약 78.9조엔

[참고] 新 경제대책 4가지 주요 내용 및 규모

구분	재정지출	사업규모
코로나19 확대 방지	22.1조엔	35.1조엔
‘위드 코로나’하에서의 사회경제 활동 재개 및 위기 대비	9.2조엔	10.7조엔
미래 사회를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기동	19.8조엔	28.2조엔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등 안전·안심 확보	4.6조엔	5.0조엔
<b>합계</b>	<b>55.7조엔</b>	<b>78.9조엔</b>

- ‘16개월 예산’으로서 추경예산과 일체적으로 편성할 2022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예비비 5조엔을 확보할 예정
- 또한, 디지털화를 진행시켜 도시 및 지방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실현 등을 위해, 2021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총무성 사용분으로 1,311억엔을 계상할 방침

[참고]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안 중 총무성 사용분

과학기술 입국 실현	- ‘비욘드5G’,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200억엔) - 그린 디지털 사회 기반이 되는 ICT 디바이스 조기 실용화(175억엔)
디지털 전원도시 구상	- 마이넘버 카드 보급 촉진(346억엔) - 해저 케이블 등 디지털 인프라 강인화(500억엔)
경제안전보장	- 양자암호통신 사회 도입의 조기 실현(90억엔)

- (경제대책 주요 내용) 동 경제대책상의 주요 조치로는 세대주의 연수입 960만엔 이하를 조건으로 18세 이하 인구 대상 10만엔 상당의 급부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중 현금 5만엔은 연내에 지급하고 육아 관련으로 용도를 한정된 쿠폰 5만엔분을 2022년 봄까지 지급 예정임.
-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사업부활지원금(가칭)을 정비하여 최대 250만엔 지급 예정으로, 기존의 ‘지속화 급부금’ 대비 지급 요건 완화 예정

##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 개요

○ 日 정부는 ▲11.19 기시다 총리를 수장으로 경제안보 관계각료회의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회의 설치를 조정하는 등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 구체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음.

- 日 정부가 2022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동 법안은 ①공급망 강인화, ②기간인프라 기능 유지, ③특허 비공개화, ④기술기반 확보 등 4개 주축으로 구성

- 美·中 양국이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반도체의 확보, ▲기밀정보 보호,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 체제 등 경제안보 관련 국내체제 정비를 촉진할 방침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 핵심>

공급망 강인화	반도체 등 중요물자의 국내생산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제도를 신설
기간 인프라 기능유지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의 제품 및 시스템 등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심사
특허 비공개화	무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감한 특허 출원은 비공개 대상화
기술기반의 확보	AI등의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정보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신설

○ (①공급망 강인화) 반도체 등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명시될 전망으로, 반도체 등의 국내공급이 지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해외기업 유치 및 일본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도모함.

- 일본은 컴퓨터나 자동차 등 많은 제품에 불가결한 반도체의 국내 수요 60% 이상을 대만 및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코로나 위기 시 공급망 혼란 등으로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감산하는 사태 발생

○ (②기간 인프라 기능유지) 통신, 에너지, 금융 등의 사업자가 중요 설비 도입 시,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담은 방침임.

-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산의 배제 등을 고려

- 경제산업성 간부에 따르면 각 업계를 규제하는 기존 법률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위협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충분히 취해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

○ (③특허 비공개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가 목적임.

- 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왔으나,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가 특허 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구조도 검토할 예정

○ (④기술기반 확보) AI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 및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할 예정으로, 장래에 민간 기술을 방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 日 방위성, 2022년도부터 경제안보 관련 정보수집 전담직원 배치

- 日 방위성이 경제안보 관련 정보수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한다는 방침이 11.13 밝혀짐.
  - 소수 규모로 시작해 필요에 따라 인원수 확충과 전문조직의 新 편성도 상정
  - 목적은 사이버 공격과 공작원 활동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획득을 노리는 중국의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적절한 보전(保全)조치를 실현
- 방위성은 각국의 군사정세나 무기 분석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위정책국조사과에 ‘경제안전보장정보기획관’을 신설(2021.4)하여 경제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보전을 목적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했으나, 정보기획관 이외에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직원은 없었음.
  - 2022년도부터 국외정보의 수집을 담당하는 ‘전략정보분석실’과 국내정보의 수집정리를 담당하는 ‘정보보전기획실’, 인적정보 관련 ‘조사연구실’ 등 과내 각 실에 전담직원을 배치할 방침
  - 정보기획관의 지원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정보수집·분석의 폭과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美·中 등 주요국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획득을 위해 경쟁 중이며, 특히 중국은 사이버 공격 외에도 투자, 학술연구 등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민감 기술 관련 정보 획득을 노리고 상황임.
  - 이에 방위성은 이러한 중국의 동향 및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분석하고 이를 방위 관련 기업 및 경산성 등 관련 성청과 공유함으로써, 유출 방지를 도모
  - 또한 향후 방위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도 2022년도부터 개시할 예정

### 4. 日 정부, 첨단기술 연구개발 기금 신설

- 일본 정부가 첨단기술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2022년도 1천억 엔 규모의 기금을 신설함.
  - 동 기금을 통해 반도체나 축전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경제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중요 기술을 지원하여 서구 국가들과의 협력 下 중국에 대항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
  - 금번 기금은 기업이나 대학이 국내에서 실시하는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정부는 연말에 실시될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시킬 전망
- 지난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일본이 주도하여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 마련에 합의한바, 금번에 신설되는 기금은 일본의 동 합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일환임.
  - 향후 G7 각국에서 핵심기술 관리를 엄격히 하고, 해외 연구자의 활동과 자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할 예정
  - 당시 회의에 참석한 스가 前 총리는 ‘중요 기술의 유출이라고 하는 문제는 G7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하며, 중국을 의식해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성 문제에 있어 협조하며 전략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
- 미국은 2020.1월 ‘중요·신흥기술 국가전략’을 공표하고 AI, 반도체 등 20개 분야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도 마련한 바 있음.
  - 나아가 바이든 정권은 연내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정리할 전망

## 6. 日 자동차 업계의 생산 회복 동향

- (혼다) 혼다는 11.18일, 12월의 국내생산이 당초 계획대로 되어 전년수준이 될 전망을 밝힘. 반도체 중심의 부품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비 감산해왔으나, 확보에 어느 정도 전망이 서서 개선경향에 있음.
- 同社は 국내에서 사륜차를 생산하는 스즈카제작소(미에현 스즈카시), 요리이제작소(사이타마현 요리이마치), 사야마공장(사야마시)에서 12월 상순 생산대수가 당초 계획대로 회복될 예정
- 11월은 10% 감산이 이어지기는 하나 부품의 조달상황이 개선된바, 12월 일본 内 생산대수는 전년실적과 동일한 수준을 기대
- 당초에는 2022.3월기(2021.4월~2022.3월)의 글로벌 판매대수 전망을 500만대라 했으나, 반도체부족 영향 등으로 420만대로 조정
- 구라이 세이지 부사장은 부품 조달처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등 대책을 추진해 연초부터 만회생산을 추진한다고 언급, 글로벌 생산은 내년 1월에 계획대로 회복되어 증산도 목표로 할 예정
- (도요타자동차) 도요타는 12월에 사상최고수준이 될 80만대 규모의 생산을 예상해, 5월 이래 7개월 만에 일본 内 전공장이 정상가동
- 9월에 2021년도 글로벌 생산대수 전망을 930만대에서 900만대로 하향 수정하기는 했으나, 12월은 전년실적을 웃도는 생산을 목표
- (닛산자동차) 닛산 자동차는 12월도 감산이 이어질 전망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 Ashwani Gupta COO는 ‘하반기는 증산해야만한다’ 며 조기에 만회 생산하고자 하는 의향을 시사

## 5. 日, 기업 실적 회복세

- 日 국내외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日 기업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11.5일까지 2021.9월 중간결산을 발표한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 748사(금융 이외 전체의 56.2%)를 대상으로 SMBC닛코증권이 실적을 집계한 결과, 70% 이상의 546사의 이익이 증가했으며 순이익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2.6배로 급증
-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게임기 판매 등 이른바 ‘등지족 수요’ 확대 ▲엔저 지속으로 인한 해외 환산수익 확대 ▲원료·화학품·식품 등 수요 확대에 의한 미쓰비시·이토추 등 상사 실적 상승 등이 존재
- 넷세이 기초연구소의 이데 상석연구원은 ‘해외의 경제회복세에 제대로 대응한 기업이 코로나19로 잃었던 이익을 되찾았다’ 고 평가

## 7. 미국의 비축유 방출 요청 관련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상승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바, (비축유 방출을 통해) 가격을 내리고자 일본에 비축유 방출 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11.18일 알려짐.
- 일본은 공급부족이나 재해 시에 한해 비축유의 방출하고 있어 日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중
- 日 경산성에 의하면 국내 비축유는 9월말시점에 국가비축이 145일분, 민간비축이 90일분 등 합계 7,425만kl이며, 전국에 10군데 있는 비축기지 및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임대받은 민간기지에 저장하고 있음.
- 동일본대지진 당시 휘발유 부족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2012년에 석유 비축법을 개정하여 방출조건을 완화, 기존에는 해외로부터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한했으나 재해 시에도 방출할 수 있도록 개정
- 단, 유가 급등으로 인한 방출은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 실시한 사례도 없는바, 미국의 요청에 응하기에는 법개정이 필요
  - ※ 에너지관계자는 ‘비축유를 방출해 장기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것은 어렵다’ 는 견해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한국, 인도에도 요청함.
- 미국은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非OPEC회원국의 OPEC+에 대해 한층 더 증산을 요청했으나, 11.4일 각료급회의에서 추가 증산을 보류
- 미국은 일본과 중국 등 석유 소비국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11.17일의 뉴욕 선물시장에서는 미국이 석유비축을 방출하겠다는 관측이 있었던 영향으로 WTI 12월 인도분 선물이 한때 약 1개월 반 만에 저가수준을 기록

## 8. 美 철강 232조 협의 관련

- 美 바이든 행정부는 11.12일,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두고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 美 상무부와 USTR이 공동으로 발표, 레이몬드 상무장관 및 타이 USTR대표는 11.15일 방일 예정
- EU에 이어 일본과도 관세의 일부 면제 등의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함.
- 美 상무장관 및 USTR 대표는 협의 개시를 발표한 12일 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나 철강·알루미늄의 과잉생산을 포함한 양국의 현안 해결을 도모한다’ 고 표명, 과잉생산은 ‘대부분은 중국에 의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고 언급
- 성명에 따르면, 하기우다 경산대신 등 일본정부 고위급과 철강·알루미늄 관세나 과잉생산 등 양자간 우려의 해소를 모색
- ‘중국 등 무역을 왜곡시키는 非시장경제의 정책과 관행을 사용하는 나라에 책임을 지게 한다’ 며, 日-美간 중국에 대항하는 방침을 표시
- 트럼프 前 행정부는 2018.3월, 일본 등 각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관세를 부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 증가가 ‘안전보장상의 위협’ 이 되고 있다고 판단함.
- 일본은 보복관세를 걸지 않았으나 안보상 위협으로 지정된 수입제한을 부과했다는 사실에 반발해온 경위가 있으며, 하기우다 대신은 2021.11월 타이 대표 및 레이몬드 장관과의 전화협의에서도 관세철폐를 요청

- 바이든 행정부는 2021.10월말, EU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일부 면제하는데 합의, EU는 미국제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취하
- 레이몬드 장관은 EU에 이어 동맹국인 일본과도 관세문제의 해결에 의욕을 표시

<미국, 추가관세 일부 철폐>

상대국·지역	재고 내용
일본	협약 개시로 합의
호주	완전철폐
캐나다, 멕시코	철폐, 수입급증 시 협의 요청
EU	일정량까지 추가관세 없는 관세 할당
아르헨티나	일정량 초과 시 수입을 중단하는 수량 제한
한국, 브라질	철강은 수량 제한, 알루미늄은 추가 관세 유지

(注) 추가관세는 철강 25%, 알루미늄 10%

## 9. ESG 평가의 변화율, 주요 투자 기준으로 주목

- o 주가에는 기업의 실적 확대 및 다수의 투자자·에널리스트의 투자 판단 등이 순식간에 반영되며, 최근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평가도 기존의 여러 가지 평가 재료와 동일한 지표로 성장함.
- 일례로 한 외국계 운용회사 펀드매니저는 日 마루이(丸井) 그룹주가 2,000엔 이하로 저평가 되어 있던 올해 여름 ▲핀테크 사업 이행 ▲ESG 활동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2021.4-9월 결산 발표 기준 마루이 그룹의 주가가 연초 이래 최고치를 갱신한바, ‘(마루이 그룹은) ESG 대응에 의해 시장의 평가가 상향되었다’고 평가
- o 한편, 주식시장에서 투자 종목 선별 기준으로 ESG 평가의 변화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ESG 펀드 운용 잔액이 증가하고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단순히 ESG 평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ESG의 개선 정도를 다른 투자가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느냐가 투자의 승패를 결정

\* 日 ‘지속 가능한 투자 포럼(JSIF)’에 따르면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적 책임경영펀드) 투자신탁의 순자산 잔고는 2021.6월 말 기준 2조 9,500억엔으로 지난 1년간 급증했으며, ESG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노정

- ESG 평가의 개선은 기업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증표이며, 추후 기업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바, ESG의 개선 정도를 분석하여 투자에 활용하는 예가 증가 중

· 미쓰이스미토모 DS에셋매니지먼트의 ‘미쓰이 스미토모 일본 주식 ESG 펀드’는 기업의 공개정보에 의한 평가 및 사내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대조하여 투자처를 결정

- o 코로나19 이후 일본 기업 및 투자자도 ESG를 의식하게 되면서, 향후 ESG 평가 변화율의 영향력이 더 증가할 가능성 있음.

## 10. 엔화 약세, 4년 8개월만 최저 수준

- o 11.17일 도쿄 외환시장의 엔/달러환율은 일시적으로 1달러=114.97엔까지 하락, 4년 8개월만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엔화의 종합적 실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도 약 50년 만의 가장 낮은 수준(68.71)을 보임.

\* 실질실효환율은 여러 나라의 통화가치 및 각국의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환율로,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995년 최고치(150)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

- 엔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 호재로 작용하는 반면 원자재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 휘발유·식품가격 상승을 불러와 가게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소비가 위축되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기조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 고바야시 일본무역회 회장은 11.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체적으로, 엔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해마다 적어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엔저로 보기는 어렵다’며 우려를 표시



- 원자재 중에서도 특히 일본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의 경우 가격이 고가 갱신 중으로 휘발유 1L당 가격은 170엔에 육박하고 있는바, 향후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되어 상품·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소비가 한층 더 침체될 우려

○ 코로나19로 이후 회복 기조로 인해 미국에서는 2021.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신장율이 약 31년만에 높아지는 등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美 금융당국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美 장기금리는 서서히 상승 중임.

- 따라서 시장 내에는 저금리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과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퍼져 엔 매도세가 대두

## 11. APEC 정상회의 폐막, 중국과 대만 CPTPP지지 확보 도모

- 11.12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된 日·美·中·臺 등 21개 국가 및 지역의 APEC 정상회의가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폐막, CPTPP 가입을 신청한 중국과 대만이 지지 확보를 도모함.
- CPTPP 가입에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함. APEC에는 CPTPP 전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어 어필하기 위한 절호의 장소임.
- (중국) 同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고수준의 아태지역 자유무역구역을 시급히 마련해야만 한다’고 며, ‘디커플링이 아닌 융합을 견지해야만 한다’고 강조, 지역경제 일체화의 중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CPTPP 가입에 의욕을 표시
- (대만) 대만에서는 차이잉원 총통 대리료 TSMC 장웅머우(모리스 창) 창업주가 정상회의에 참가, 同人은 11.13일 정상회의에서 CPTPP가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대만은) 투명성 높은 시장경제를 보유하고 있어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

- (미국)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공정한 무역과 투자를 추진한다’고 강조, 국유기업 우대책 등을 취하는 중국을 견제한 형태

○ (APEC 정상선언) 채택된 APEC 정상선언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과제라며, ‘WTO를 핵심으로 한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 12. APEC 정상선언 핵심내용 중 백신 관련

- 11.12(금) 폐막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은 코로나19 백신의 생산·공급의 확대가 ‘계속해서 우선사항이 될 것’이라 강조함.
- 同 선언에서는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의 백신 및 치료제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데 일치했으며, 인적왕래 촉진 협력을 포함해 함께 연계하여 코로나 위기 후의 성장을 목표
- 現 백신 공급 체제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명기,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며 백신생산기술의 자율적인 이전 등을 통해 공급확대를 지지하는 자세를 표명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성장은 비즈니스 및 관광의 인적왕래가 뒷받침해왔으며 코로나 감염확산으로 인적 왕래가 제한되어 경제활동이 정체됨에 따라 받은 손실은 ‘매우 크다’며 우려를 표명

### <APEC 정상선언 핵심>

·코로나19 백신의 생산과 공급의 확대는 우선사항
·현재 백신공급체제는 불평등과 인식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의 백신과 치료약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데 일치
·백신의 접종증명의 활용 등에서 협조. 인적 왕래 촉진에 APEC가 보다 큰 역할을 담당

### 13. 日 정부 코로나19 제6파 대책 전체상 발표

- 日 정부는 11.12일 2021년 여름 제5파 당시 병상 부족에서 얻은 교훈을 근거로, 당시보다 환자가 30% 늘어나더라도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 수 및 병상 사용률 증가를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책 전체상을 발표함.
- (병상 증가) 일례로 도쿄도는 제6파 대비 필요한 병상 수를 6,891개로 계산, 제5파 당시 대비 485개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아이치 현은 코로나19 환자용으로 확보 중인 현내 79개 병원의 1,735개 병상을 2021.11월 말까지 최대 2,534개까지 확대할 예정
- (병상 사용률 증가) 또한 제5파 당시 의료제공체제 부족 사태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전용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거부하는 ‘유령 병상’ 문제가 지적\*되어, 日 정부는 동 전체상을 통해 ‘제6파’ 등 감염 피크시에 코로나19 병상 사용률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언급
- \* 일례로 도쿄도의 경우 입원 대기자가 사상 최대였던 8.11일 기준 전체 43%의 병상이 비어 있어 유령 병상 문제가 지적

### 14. 사업자 지원 등 포함한 경제대책 원안 공개

- 日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경제대책 원안이 공개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월 사업수입이 50% 감소한 사업자 대상 최대 250만 엔, 개인 대상 50만 엔의 감소액 급부 지원,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3년 간 4000억 엔 정책패키지 창설 등이 포함됨.
- 이는 11.15일 자민·공명당 회의에서 제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경제활동 재개 및 철저한 위기관리, ▲‘새로운 자본주의’ 발동,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 등 4개를 중심으로 각종 시책이 포함

- 간호·개호·보육 현장의 임금인상 등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11.19 결정 예정

#### ※ 구체적인 시책

- 월 사업수입이 50% 감소한 사업자 대상 최대 250만 엔, 개인 대상 50만 엔의 감소액 급부 지원
- 관광지원사업 ‘Go To 트래블’ 사업재개 준비
- ‘Go To Eat’ 및 ‘Go To 이벤트’는 내년 4~5월 황금연휴 경까지 지속
- 고유가 대책으로 지자체 대상 특별교부세 지원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무료
- 18세 미만 대상 10만 엔 상당 급부(소득제한 조건)

- 지역 및 업종과 관계없이 2021.11월부터 2022.3월까지 한 달 수입이 2019~2021년 중 어느 한 시점의 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 예정이며, 30~50%가 감소한 경우 사업자가 최대 150만 엔, 개인은 최대 30만엔이 지급될 예정임.
- 동 사업자 지원은 이미 종료된 지속화급부금의 상환(중소기업 최대 200만엔)을 상회하는 조치이며, 지속화급부금 지급시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등에 따른 사전확인을 철저히 할 방침
- 아울러,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자 신청이 원칙

### 15. 국내 백신 개발 사령탑 구축

- 日 정부는 11.19일 결정할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국산 백신 개발 기반 강화를 위해 연구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거점을 구축하기로 함.
- (배경) 일본은 현재 국내 접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1.6월 G7에서는 향후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치료제의 개발 기간을 100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100일 미션’이 발표된바, 日 정부는 동 상황을 감안하여 국산 백신의 개발·제조 능력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지원 내용) 연구개발 지원 거점은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에 설치될 ‘선진연구개발전략센터(SCARDA)’로, 동 센터를 사령탑으로 하여 산학관의 유력한 연구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연구비를 투입,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약을 개발하는 벤처에도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
  - 제조 거점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 긴급 시에 백신 제조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 시설 정비 및 개보수를 촉진시킬 예정으로 보조금은 정비 비용의 90% 정도가 될 전망
- (예산) 팬데믹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및 백신 제조 거점 정비 촉진을 포함하여 총 5,000억엔 규모의 관련 예산을 계상할 방침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AMED에는 2,500억 엔 이상의 기금을 구축할 방침이며, 제조 거점 지원에도 약 2,300억 엔을 계상

## 16. 3차 접종 관련 기본방침 결정

- o 11.15 日 후생노동성 전문가분과회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대상자, 접종기간 등을 정하고, 3차 접종 시의 교차접종을 허용키로 함.
  - (기간 및 대상) 추가접종 기간은 2021.12.1~ 2022.9월까지, 대상은 18세 이상 희망자 전원
    - ※ 중증위험이 있는 고령자·기저질환자, 의료종사자에게는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12-17세 대상 3차 접종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집 후 검토 예정
  - (접종 간격) 2차 접종으로부터 8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행상황 등 지자체의 판단 하 6개월 간격의 접종 등 간격 단축도 인정

- (비용) ‘임시접종’으로 설정하여 전액 공비 지원 예정
- (사용 백신) 미국, 유럽의 동향을 감안해 3차 접종에는 mRNA 백신을 사용
- (교차접종 허용 이유) 해외 임상시험 등을 감안, 교차접종 관련 효과 및 부작용에 문제 없다고 판단
- o 3차 접종용 화이자 백신 배송이 11.15에 시작됐으며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약 410만회분이 11월 중 전국으로 배송될 예정임.

## 17. 교차접종 허용 예정

- o 日 후생노동성은 11.15 개최할 전문부회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시 교차접종을 허용할 방침임.
  - 11.12 日 정부가 12월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할 방침을 명시한 가운데, 교차접종을 허용함으로써 추가접종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
- o 한편, 11.10 日 다케다약품공업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에 신청함.
  - 현재 日에서 추가접종이 승인된 것은 11.11 승인된 화이자 유일
- o 한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는 3차 추가접종 시 1,2차 백신과 상관없이 유효성이 높은 mRNA 백신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화이자, 모더나, J&J 백신 중 선택이 가능함.
  - 단,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추가접종에 교차접종 포함한 어느 백신을 사용해도 바이러스 항체 수치가 상승했으며, 부작용도 동일 백신과 교차접종 사이에 차이 無

## 18. 방역대책 완화 대상자에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 추가 방침

- 日 정부는 입국시 방역 대책 완화 대상자에 존슨앤존슨社 백신 접종자를 추가할 방침임.
  - 日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대기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완화책을 도입했으나, 이제까지 대상자는 일본에서 승인을 득한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백신 접종자에 한정
  - 금번 존슨앤존슨 백신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국·유럽 등 비즈니스 관계자의 일본 방문이 용이해질 전망
  - 존슨앤존슨은 2021.5월 일본에 백신 약사 승인을 신청했으나, 日 정부는 아직 同社 백신을 약사 승인하지 않은바, 방역대책 완화 대상자 추가가 약사 승인보다 선행될 가능성이 존재
-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후생노동성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2021년 여름의 ‘제5파’까지의 검증 결과를 공표함.
  - 코로나19용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타 질환에 비해 2-3배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실제로 운용이 가능한 병상도 80% 정도 사용이 한계라는 점을 지적
  - 전문가들은 확보한 병상을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정신 질환·투석 등 기타 질환을 보유한 경우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 점과 입원 예정 환자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이에 대해 아난 히데아키 가나가와현 의료위기 대책 통괄관은 ‘입원을 위해서는 침대 이외에도 의사로부터 치료 방침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등 실제 작업이 수반되는 만큼, 90-100%의 가동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

## 19. 직장내 3차접종 모더나 사용

- 日 후생노동성은 11.17일, 직장 내 3차 접종용으로 1-2차와 동일하게 모더나 백신을 활용할 방침을 나타냄.
  - 후생성은 이전 직장 내 접종에서 모더나 제품을 사용한 경험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원활하게 접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차 접종까지 직장에서 접종한 직원이 3차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원할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
  - 기업에는 접종 1회당 약 2,000엔의 재정지원도 계속하는 등 2차 접종까지의 체제를 유지할 예정
  - 직장 내 3차 접종은 2022.3월부터 시작할 예정, 2022년 초부터 지자체 관할 하에서 시작될 고령자·일반인 접종을 보완할 예정

## 20. 5-11세 접종 2월 시작

- 日 후생노동성은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르면 2022.2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각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접종 체제 준비를 실시토록 문서로 통지함.
  - 현재 美 화이자가 12세 이상 접종용 백신을 5-11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후생노동성은 동 통지를 통해 화이자 백신이 승인될 경우 5-11세는 1회당 주사량이 적은바 12세 이상 접종용과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취급하도록 요구
  - 후생성 전문가분과회는 11.15일, 관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 방침은 미정으로, 분과회에서는 ‘(접종을) 받을 기회를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한편 아동의 경우 감염시에도 중증화 리스크가 낮아 ‘(백신) 부작용 리스크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 21. 백신검사 패키지 개요 공표

- 日 정부는 대규모 행사 참여 및 음식점 이용에 관한 행동 제한을 완화하는 백신 검사 패키지 개요를 11.16일 공개함.
  - 백신접종증명서는 2차 접종 이후 14일 이상이 지난 증명서가 대상으로, 일단 유효기간은 없으며 사본 및 (접종증명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도 활용 가능
  - 검사의 경우 PCR 검사는 3일 이내, 항원검사는 1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결과를 득하는 것이 원칙
- 현재 日 정부(디지털청)는 QR 코드를 활용한 접종증명 어플을 개발 중이나, 운용 개시는 올 12월로 예정된바 아직 未공개 상태임.
  - ※ 도쿄도 등 지자체에서는 이미 어플을 기도입함.
  - 백신접종증명서로서 이미지파일도 인정된다면, 정부가 개발한 접종증명 어플은 주로 엄격한 본인확인이 필요한 해외도항용 등으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
  - 어플 도입이 경제재개 시점과 맞지 않았던바, 본인확인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으며, 복수의 어플 및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의 혼잡 등이 지적되고 있음.

## 22. 행동제한 완화책 개요

- 日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행동제한 완화 방안이 11.11일 밝혀졌으며, 日 정부는 11.19일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동 방안을 결정하고 11월 말 이후 이른 시기에 완화 방안을 적용할 예정임.
  - 프로야구나 축구·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는 현재 참여 인원의 상한선을 5,000명 또는 정원의 50% 중 많은 쪽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행동제한 완화 후에는 관객의 함성 금지 등 감염 방지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원의 100%까지 입장을 허용할 예정
  - 또한 긴급사태선언 발령 지역은 상한 1만명,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발령 지역은 2만 명까지를 상한으로 둘 예정이며, 백신·검사 패키지를 활용하여 행사 주최자가 참여자의 접종 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경우 선언 및 중점조치 하에서도 정원 100%를 인정
  - 음식점에 대해서도 제한을 완화할 방침으로, 현재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회식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완화 후에는 인원 제한을 철폐할 예정
  - 긴급사태선언 발령 시 현행대로라면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 및 인원 제한, 주류 제공 정지를 요청하나, 완화 후에는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더라도 도도부현이 인정한 음식점일 경우에는 영업시간 단축은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주류 제공도 인정하며, 백신·검사 패키지 활용점은 인원 제한을 철폐
  - 또한 도도부현 간 인적 이동과 관련해서도 긴급사태선언 발령 시에도 백신 접종 완료자 및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숙 요청은 없을 예정

## 23. 日 정부, Go To 트래블 1월 중 재개 방향

- 日 정부가 2020년 말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단했던 ‘Go To 트래블’을 이르면 2022.1월 중순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라 밝혀짐.
- (할인폭) 기존 제도는 1인 1박당 여행 대금의 35%(상한선 1만 4,000엔)을 할인받을 수 있으나, 금번 재개시에는 여행 대금의 30%(상한선 1만엔)으로 할인폭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 (쿠폰권 정액제) 숙박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는 쿠폰권은 평일 3,000엔, 휴일 1,000엔 정액제로 할 방향으로 가능한 한 인파가 집중되지 않는 평일에 여행토록 촉진할 예정이며, 사용 가능 기간도 4월 말-5월 초의 대형 연휴(골든위크)는 제외할 방침
- 기시다 총리는 11.10일 기자회견에서 ‘감염 상황을 확실히 판별하여 재개 시기를 결정하고자 한다’며 재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생각을 강조

## 24. 1일 입국제한 인원수 완화

- 日 정부는 11.26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시행 중인 1일당 입국자수 제한을 완화하여, 현행 3,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임.
- 이는 日 정부가 11.8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유학생 등의 신규 입국을 용인한 데 따른 입국자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검역체계 강화가 가시화되어 입국자 수를 늘려도 日 국내에서 감염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하에 동 완화조치 시행
- 입국자는 공항 등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하게 되며, 체류한 국가에 따라서는 검역소가 확보한 시설 등에서 대기가 필요

## 25. 특정기능 체류기간 무기한 검토

- 日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손 부족이 심각한 14개 분야 근무를 전제로 발급해온 체류자격 ‘특정기능\*’의 체류 기한을 2022년 사실상 무기한으로 변경할 예정임.
- \*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서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9.4월 도입된 체류자격
- (변경 전) 특정기능은 실무경험이 있어 별도 교육훈련이 필요 없는 경우 최장 5년 체류 가능한 ‘1호\*’, 현장총괄역 수준의 근무 숙련도가 시험을 통해 인정될 경우 장기체류가 가능한 ‘2호\*\*’로 나뉘며, ‘2호’는 갱신이 가능하고 가족도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체류 10년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반면 건설·조선 분야에만 한정
- \* 1호 분야: 건설·조선·식품제조업·농업·산업기계제조·소형제조업·외식업·전기전자정보관련·건물 청소·어업·자동차정비·숙박·항공·개호
- \*\* 2호 분야: 건설·조선
- (변경 후) 향후 기존 ‘1호’에만 해당했던 분야(개호 제외)도 체류기한이 무기한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개호’는 일본 내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시 영주권 취득 가능해질 전망
- (추진 일정) 현재는 출입국재류관리청 및 관계 부처가 체류자격 인정의 전제가 되는 기능 시험의 방향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총리관저 및 여당과 조정하여 2022.3월에 정식으로 결정하여 성령 및 고시를 개정할 예정
- 금번 변경을 통해 그간 전문직 기술자들에게만 제공되었던 영주(永住)의 길이 근로자들에게 폭넓게 제공되기 시작함으로서,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일손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대책 등으로 특정기능 체류자격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은 2021.8월말 시점 약 3만 5천명에 지나지 않는바, 일본상공회의소는 2020.12월 ‘외국인 인재 대상 기대 및 관심이 높다’며 대상 분야 추가 등을 요청
- 단, 자민당 보수파 등은 외국인의 장기 취업 및 영주 확대는 ‘사실상의 이민자 수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

## 26. 항원 검사 키트 인터넷 판매 허용 연기

- o 日 정부가 11.19일 공표 예정인 경제대책 원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항원검사키트’의 인터넷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삭제됨.
- (정권: 인터넷 판매 허용 의지) 기시다 정권은 코로나19 감염 대책과 경제활동 정상화 양립을 위해 검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검사 확대를 위해 당초 항원 검사키트 인터넷 판매 허용을 검토했으며 마키시마 카렌 규제개혁대신도 11.15일 항원검사키트 연구소를 시찰하여, 인터넷 판매 허용에 대한 의욕을 시사
- (후생성: 감염확대 리스크 우려) 단, 후생노동성은 무증상 감염자가 실수로 음성 진단을 받을 경우, 해당 감염자가 동 진단에 안심하고 외출하여 감염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
- (의료계: 사용자 인식 우려) 나카가와 일본의사회 회장도 11.1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약사가 키트 구입 희망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실시하여 구입자가 이해 여부에 서명하는 방식인바, (동 방식과 같이) 항원검사 키트는 검사 정밀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인터넷 판매 허용을 거부
- o 즉, 급변 인터넷 판매 허용이 연기된 이유는 기시다 정권이 목표로 하는 검사 확대보다 의료계 등의 주장이 우선된 것으로 보임.

- 당초 후생노동성 내부에서도 인터넷 판매 허용 여론이 일부 존재했으나, 日 닛케이신문은 2022년 하절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의료계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동 조치를 연기한 것으로 분석
- 고노 다로 前 규제개혁대신은 블로그에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검사 체제를 정비하여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다’고 기재하여 후생성을 비판

## 27. 후지필름 아비간 치료제, 임상시험 효과 無

- o 11.12 日 후지필름홀딩스의 항바이러스제 ‘아비간’에 대해 캐나다의 개발협력기업은 최종단계 임상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함.
- 후지필름은 국내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나 향후 미국 상용화는 곤란해졌으며, 국내 승인 취득을 위한 임상시험 또한 대상 환자 부족으로 부진해 국내 조기승인 전망 불투명

/끝/